

유럽연합의 지중해 지역 정책 : 문명과 경제사이

정성훈* · 강현수**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중부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 서론

지중해 연안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럽 문명의 발상지였으며, 근대까지 유럽과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바다로서 교역과 통상의 공간적 매개체였다. 이는 지중해가 문명 창출의 근원지였음을 뜻한다. 지중해 문명이란 '지중해 일원(연안과 해상)에서 다원적인 여러 문명들의 융합에 의해서 생성 발달된 복합적 해양문명'을 뜻한다(정수일, 2002). 이러한 문명융합은 지중해 문명의 특징이기도 하며, 지중해의 중요성, 나아가 '지중해'라는 용어가 해양문명을 논할 때마다 문화적 교류지역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¹⁾ 정수일(2002)에 의하면,

이질문명간의 교류과정에서 이른바 문명접변이라는 문명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에는 문명의 접변으로 인해 각기 상이한 문명요소가 건설적으로 혼합되어 일어나는 융합(fusion)과 파차가 아닌 제3의 문명이 형성되는 융화(deliquescence), 그리고 일방적 흡수인 동화(assimilation)가 있다. 다원적인 문명의 만남과 교류에 의해 형성된 지중해 문명의 경우는 대체로 융합에 의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문명이 창출되곤 하였다.

따라서 지중해를 제패한다는 것은 유럽, 나아가 그 당시 기준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 이후 지중해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대서양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발전의 축이 남부 유럽에서 북부 유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지중해 연안 지역은 점차 그 화려했던 명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금도 유럽에서 지중해에 인접한 남유럽 지역들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져 있다. 그렇지만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시 지중해 시대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럽통합과 유럽경제권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볼 때, 지중해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1980년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잇따라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의 영역은 지중해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연합은 지중해에 연접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12개국을 포괄하는 지중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간의 경제적 격차, 이

1) '지중해'라는 용어가 '모든 해양문명의 장'으로 표현될 때, 그 용어는 지리적으로 묶인 특정 장소를 떠나 범용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윤명철(2002) 참조.

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뿌리깊은 반목 등으로 인해 그 전도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로(유럽연합국가들 및 비유럽연합 국가 12개국) 구성되는 이른바 지중해 경제권의 현황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이 지역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지중해 지역은 역내 지역정책의 대상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유럽 지역) 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외 정책의 대상(비유럽연합 국가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중해 자유무역지대라는 큰 구상 속에서 이 두 정책은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지중해 북부 연안의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남부 연안의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둘째,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남부지역), 그리스 등 지중해에 연한 남부 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 내에서 상대적 저발전 양상과, 이러한 유럽연합 내부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지역 정책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이는 향후 지중해 동부와 북부에 연한 국가들이 유럽통합의 확대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중해에 연접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대한 대외 정책의 방향과 이들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이들 프로그램 중 특히 재정지원과 관계있는 MEDA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중해 지역의 경제 현황

지중해 지역 국가는 문화지리적으로 크게 다음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EU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및 그리스이다. 두 번째 그룹은 지중해 북·동부 연안의 비EU 국가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터키, 키프로스 및 몰타 등 12개 국가들이다. 위의 두 부류 중 EU의 회원국들은 현재 EU에 통합되어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나머지 지중해 북·동부 연안의 12개 국가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네 부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 EU 가입을 희망하는 EU준회원국 : 키프로스, 몰타, 터키
- 이른바 마그레브(Maghreb) 국가들 :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 마스라크(Mashraq) 국가들 : 지중해 동부 연안 국가들(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위와 같은 지중해 지역전반에 걸쳐서 제시된 문화지리적인 분류에 덧붙여 경제 수준과 산업 특성에 기초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지중해 국가들은 크게 둘로 양분되어 있

다. EU에 속하는 남부 지중해 국가들과 북·동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격차이다(표 1). 최근 후자 그룹의 국가들의 GNP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지중해 지역 총인구의 약 41%만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4개국(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및 그리스)이 이 지역 전체 GNP의 86%를 점유하고 있다. (World Bank, 1995). 더욱이 최근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남부 유럽 4개국의 경제점유율은 인구의 1/3점유, 부의 4/5를 차지하리라는 예측치를 내놓고 있다(Dunford, 1997).

표 1. 지중해 연안국가의 일반 현황(2000)

	면적(천km ²)	인구(만명)	인구밀도(인/km ²)	1인당 GNP(달러)
유럽	1,781.7	19,836	111	
알바니아	28.7	349	121	810
크로아티아	56.5	428	76	4,620
프랑스	543.9	5,933	109	24,210
지브롤터	0.006	3	5,119	
그리스	132	1,060	80	11,740
이태리	301.3	5,763	191	20,090
몰타	0.3	39	1,239	9,330
모나코	0.002	3	13,636	24,693
유고슬라비아	102	1,070	105	900
슬로비니아	20.3	193	95	9,780
스페인	504.7	3,999	79	14,100
포르투갈	91.9	995	108	10,010
서아시아	1,006.9	9,525	95	
키프러스	9.3	76	82	10,380
이스라엘	21.9	584	266	16,180
레바논	10.5	358	342	3,560
팔레스타인	6.2	310	497	
시리아	184.1	1,631	89	1,020
터키	775	6,567	85	3,160
북아프리카	6,028	14,438	24	
알제리	2,381.7	3,119	13	1,550
이집트	997.7	6,836	69	1,290
리비아	1,775.5	512	3	5,650
모로코	710.9	3,012	42	1,240
튀니지아	162.2	959	59	2,060
총계	8,816.6	43,799	49	

출처 : 정인철(2002)에서 재구성

1962-1992년 약 30여년 동안 지중해 지역내 GNP 추이를 살펴보면, 다양한 국가군이 나타난다. 먼저, 프랑스가 이 지역의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키프러스, 몰타 등이다. 이 그룹은 지난 30여년동안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세 번

제 그룹에 속하는 국가군은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로써 지난 30여년 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 보유고로 인해 다소 그 지위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군이다. 네 번째 그룹은 1970년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가 1980년대 들어서 유가변동 및 석유·가스관련 산업화의 실패를 경험한 리비아, 알제리 등이 이에 속한다.

결국, 이와 같은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EU는 유럽통합의 확대과정에서 시기적 차별성을 띠고 지중해 지역에 접근해 왔지만, 통합의 전체적인 기조는 개발을 위한 EU차원의 기금지원을 통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신자유주의적 시장에 참여' 하도록한다는 일관된 정책노선을 견지해 왔다. 현재 이 지역 최대의 경제적 현안은 지중해를 둘러싼 두 축, 특히 지중해 북부 연안의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들과 동부 및 남부 연안의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간의 경제 협력, 나아가 자유무역지대 구성이다. 그러나 각 국가들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입장의 차이, 뿌리깊은 역사적 갈등 등으로 인해 그 전도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3. EU의 남부 지중해 회원국 지원 정책

1) EU 확대과정과 지역정책의 역사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유럽에서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시화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이다. 전쟁의 원인이 지나친 경제적 경쟁 때문이었다는 반성 속에서 경제적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의 창설이 평화를 위한 기초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1951년 파리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을 포함한 6개국 간에 파리조약이 체결되고 이듬해 8월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정식 발족이 이루어졌다. 이후 ECSC 가입 6개국은 경제통합을 도모하였고, 1957년 회원국간 무역장벽을 제거와 공동역외관세의 실행, 그리고 공동의 경제 정책 및 농업 지원 등을 의도한 로마조약의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설립되었다. 1967년 기존 3개의 공동체 즉, EEC, ECSC, 그리고 Euratom은 통합조약에 의해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로 재탄생하게 된다. 1973년 영국, 덴마크, 그리고 아일랜드가 EC에 가입하여 회원국은 9개국으로 확대된다. 1980년대 들어와 새로운 통합에 대한 열의가 확산되고,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제통합의 한 단계 높은 진척인 유럽단일시장 (Single Market) 완성을 위한 유럽 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가 1987년에 조인되었다. 1990년대는 탈냉전에 따른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의 시행, 동유럽을 포괄한 회원국 확대 노력 그리고 단일유럽통화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경제통합의 단계로의 진입을 이룬 시기이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는 1992년에 체결된 EU조약,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이다. 1993년 11월부터 정식 발효된 이 조약에 따라 새

로이 EU(EU: European Union)이 탄생하였다. 이로부터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내무치안정책의 시행 그리고 경제화폐동맹을 통해 밀접한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발전해 나간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동유럽 각 국과 준회원조약을 통해 2000년대 초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의 가입될 예정이다(이종광, 1996; 강원택·조홍식, 1999; 이창훈 외, 2000).

이와 같은 EU의 확대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정책이다. 이 지역정책의 목표는 바로 EU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진 낙후지역의 경제발전이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지역정책이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된 이유는 바로 EU내 각 지역들 사이의 발전의 격차가 유럽인들의 진정한 사회경제적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EU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지역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왔다. 첫째, 오랜 기간동안 서로 상이한 역사, 문화, 제도를 지녀왔던 EU 회원국가들을 하나의 사회 그리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저항이 필연적일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나타난 더욱 큰 문제점 중 하나는 EU내 지역간 발전의 격차 및 계층간 소득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 갈등과 저항의 강도도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낮은 주민소득, 높은 실업률 등 낙후지역 혹은 경제침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도 하나의 유럽 사회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이들의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과거 국민국가가 맡아 왔던 낙후지역 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책임을 통합 이후에는 당연히 EU 차원에서 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유럽 통합의 주요 계기가 되었던 각종 조약문에서도 잘 나타난다(Bachtler, J. & Turok, I., 1997); Balchin, P. et al., 1999). 1957년 로마조약에서는 “상이한 지역들간의 격차와 저발전국의 후진성을 줄여서 회원국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한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는 나중에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로 수정된다.2)

이와 같은 현실 인식하에서 EU 지역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요약하자면, EU지역정책은 1957년 로마조약 이후 형성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과 유럽농업지도

2) EU가 추구하는 경제통합은 주로 국가·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완화(convergence)인 반면, 지역정책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인 ‘결속’(cohesion)의 범주로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이 EU 지역정책이 사회정책과 함께 갈 수 뿐이 없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EU 사회·지역정책을 경제통합과 동시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가 시장통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정치적 통합은 지역격차 등이 계속 심화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인 필요성으로서는 단일통화동맹에 주변국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사회·경제적인 격차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격차가 선행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격차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 EU내 지역간 교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는 인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두 번째 이유와 다소 유사한 맥락이긴 하지만, 통합 자체가 가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불이익의 증대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기금(Guide Section o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설립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지역정책이 현실적인 수단을 갖추게 된 시기는 1973년 오일쇼크이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이후 ERDF)이 창설된 1974년부터이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유럽단일시장 프로그램 추진 및 1987년 이의 완성을 위한 유럽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가 채택되면서부터 지역정책이 EU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김영순, 1996; 정홍열, 2001; 강현수, 200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수립 초기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EU 지역정책의 목표는 EU차원에서 극심하게 나타난 지역격차 해소에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은 잘 사는 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의 분배체계를 기초로 하는 재정적 결속력에 있다. 이러한 재정적 결속력의 핵심은 구조기금의 지역간 적정배분으로, 이를 위해 구조기금의 대상지역들인 'Objective 지역'들을 분류해왔다.³⁾ EU는 【1989-1993 프로그램】과 【1994-1999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에 의하여, 【2000-2006 프로그램】에서는 이의 대상을 서유럽에서 동유럽 후보회원국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중해 북·동부연안 국가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조기금 분배를 통한 지역격차해소 정책은 '보조금 전쟁'이라 불릴 만큼 지역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켰다. 이는 국경을 초월하여 때로는 같은 국경내에 있는 지방정부간 프로젝트 유치 위한 출혈 경쟁을 유도했고(정성훈, 2002), 이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쟁풍토에서, 보조금 [쟁취를 위한 지역간] 전쟁(subsidy war)이 유발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불균등 발전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지역이 승리자가 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비록 [EU 차원에서] 승리자의 이익을 패배자들에게 재분배하도록 도와주는 지역발전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쟁여건에서 지역불균등 발전은 명백히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조금 경쟁은 무용하고 낭비적인 일이다(Dunford, 1994).

2) EU의 남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 끌어안기

유럽통합 과정에서 EU내 각 회원국들의 지역격차는 지역GDP 및 실업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각 지표를 통해 보면 유럽 전체 차원에서 지역격차는 시기적으로 격차완화(convergence)와 격차확대(divergence)를 반복하였다. 대체적으로, 세계 2차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전후 황금기 또는 전후 포디즘의 성공기로 국가·지역격차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오일쇼크 및 포디스트 성장의 한계로 인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국가·지역격차는 점차로 확대되기 시작했다(Dunford, 1994). 최근 이와 같은 격차확대는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EU차원에서 어느 정도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지만(Martin, 1999), 이러한 현상은 회원국이나 그 지역마다 매우 상이

3) EU Objective 지역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994-1999 분류기준). ① Objective 1 : 발전이 뒤쳐진 낙후 지역, ② Objective 2 : 전통산업이 쇠퇴한 구공업지역, ③ Objective 3 : 장기실업지역, ④ Objective 4 : 구조조정촉진지역, ⑤ Objective 5a : 농업구조조정 촉진지역, ⑥Objective 5b : 농촌지역발전과 더불어 경제적 다변화가 필요한 지역, ⑦ Objective 6 : 인구밀도가 극히 낮은 지역. 이 분류체계를 축으로 EU의 주변지역들이 설정되며, 이 지역들은 구조기금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http://europa.eu.int> 참조).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격차완화와 확대의 문제를 EU 남부지중해 연안 국가들간의 관계적 차원에서 조명할 때, 다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EU의 지역불균등 문제는 EU가 통합의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EU차원에서 지역적 불균형은 증폭되었다(Martin, 1999; Cowling, 1999). 그 이유는 1970년대 EU에 가입한 영국을 제외한 아일랜드, 1980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새로운 회원국들은 평균 일인당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최하위 국가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에서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는 지역들은 런던-암스테르담-파리-프랑크푸르트-북부 이태리에 이르는 전통 역사도시를 축으로 하는 지역들로 구성된다면, 대표적인 낙후지역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지역들인 스페인, 이태리 남부,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으로 구성된다(Dunford, 1994). 이와 같은 국가들이 1980년대 EU에 가입하면서 EU내 '중심'지역과 '주변'지역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1981~1986년 사이 EU의 기존 지역정책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했다. 이는 새로 가입한 남부 회원국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른바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1985년 Integrated Mediterranean Programmes(IMP)의 시작이다. 이는 기존 프로젝트에 기반한 지역정책의 접근법을 뛰어 넘어, 프로그램 형태의 정책적 접근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88년 EU 지역정책의 대규모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⁴⁾ 이로 인해 남부 유럽주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들(주로 Objective 1지역들)은 EU의 증액된 예산의 수혜자가 된다(그림 1). 이와 더불어 이 지역들은 EU의 결속기금(Cohesion Fund: CF)의 수혜국으로 지정되는 데, 이 기금은 일인당 GDP 기준 EU 평균 90% 보다 낮은 국가의 인프라구조와 환경프로젝트에 추가적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이와 같이 살펴 볼 때, EU 회원국인 남부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EU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정책을 통해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고 있는 EU에 완전한 포섭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EU가 표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쟁시장에 철저히 내맡겨지고 있다. EU의 구조기금은 이들 국가의 하부구조를 현대화하면서, 외생적 경제발전전략을 철저히 추구하도록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 유치에 둘러싸고, '남-남(南-南)협력'이 아닌 '남-남경쟁'체제를 형성한다. 이의 대표적

4) 1988년 이후 EU 지역정책은 대규모로 개편되게 된다. 개혁의 계기는 EU내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없이는 단일시장이 추진될지라도 유럽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으로는 ① Objective 지역을 1인당 GDP와 실업률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Objective 1지역인 대부분 남유럽주변 지중해연안에 위치한 '발전정체지역'에 증액된 예산의 2/3를 직접적으로 배분한 것(그림 1), ② 분리·운영되어온 3개 구조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 ③ 적절하고 포괄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제시를 구조기금 수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 ④ 재원을 증대시킨 것 (1988~1993년동안 2배 증액) 등을 들 수 있다. 1994년 이후의 프로그램에서는 남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EU의 평가하에 2000년대에 이 프로그램은 동유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 축으로는 북·동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

5) 그러나 결속 기금 지원은 EU가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간 격차완화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은 지역이 아닌 국가가 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결속기금은 지원기준이 지역인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조 기금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

인 예가 한국기업의 포르투갈 투자와 스페인 투자이다(Jung, 2000).

1980년대 초반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는 최초로 한국기업인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국가이다. 이후 약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삼성의 투자는 포르투갈 정부와 마찰 및 언어 등 문화이질감 등으로 인해 영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더욱 급격한 변화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포르투갈 인접국인 스페인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남부 지중해 연안 국가 중 지역생산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카탈로니아인으로 구성된 바로셀로나에서 생산성의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초기 포르투갈에서 이루어졌던 투자의 대부분을 스페인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후반 한국기업 투자의 견지에서 포르투갈은 상위수준에서 중하위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지역화(단일 유럽을 향한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 남부 지중해 국가군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철저히 보호없는 완전한 지역시장으로의 편입이다. 둘째, 이로 인해 남부유럽 지중해 연안에 새로운 남남 경쟁체제가 경제논리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EU차원에서 저임금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의 지역분업체제 형성에 이 지역들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EU의 정책적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부 및 동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현재 어떠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을까? 이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 EU의 남동부 지중해 지역정책 : MED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EU의 남동부 지중해 지역 정책개관 : 비교류국 관계에서 유럽-지중해 파트너십 형성까지

유럽의 남쪽 바다 지중해를 둘러싼 지중해 연안 지역은 EU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지중해 바다는 세계전체 바다 면적의 1%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지만, 세계 해양무역의 30%나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전은 유럽 연합은 물론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중해에 접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고민거리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인접 중동국가들의 뿌리깊은 불화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EU 입장에서는 이들 지역이 EU의 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불안정, 갈등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U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외 관계의 우선 순위는 이 지역에서 경제 번영을 도와주고, 민주주의의 증진과 사회적 안정, 그리고 전쟁 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유럽 연합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EU(당시 EC)의 지중해 정책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무역에 있어서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 동안 EU가 다수의 지중해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이는 '상호협약'이라기보다는 미미한 차원에서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성이 다소 약한 '상호조정'과정에 불과했다 (Jones, 1997). 1972년 이후 비로소 EU의 지중해 세계화 정책(Global Mediterranean Policy: GMP)의 일환으로 상호간 자유무역과 EU의 지중해 지역 재정지원을 토대로 일련의 협정들이 체결되기는 했으나, 이 또한 활발한 교류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EU의 對지중해 정책에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은 1980년대 중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가입으로 인해 EU의 지역정책의 그 기초가 변할 정도로 EU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더욱이 다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인 키프러스, 몰타, 터키 및 모로코 등이 준회원국의 반열에 서면서 1990년도에 EU는 '신지중해정책'(New Mediterranean Policy: NMP)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바르셀로나 선언을 토대로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11월, 15개 EU 회원국과 EU 비회원국이면서 지중해 연안 국가인 12개 국가들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함께 모여서 유럽-지중해 파트너십 관계 결성을 선언하는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여기 모인 27개 국가들은 지중해에 평화와 안정, 경제 협력, 국민들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께 선언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1).

바르셀로나 선언에서 강조된 사항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었다. 첫째, 지중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킨다. 둘째, 지중해 지역에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킨다. 나아가 지중해 지역을 2010년을 목표로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경제 협력에 있어서 우선 순위로 한다. 셋째, 사회 분야와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보건, 시민사회, 청소년들간의 교류를 촉진시킨다. 바르셀로나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2010년까지 EU과 지중해 연안국 사이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과 EU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중해 연안국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야기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EU는 'MEDA' 라는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바르셀로나 선언은 이후 마약밀매, 테러, 이민, 분쟁 예방, 인권존중 등 평화와 안정에 기초한 정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로-지중해 헌장(Euro-Mediterranean Charter for Peace and Stability)으로 계승되었다.

2) 바르셀로나 선언 이후의 진행 과정과 향후 과제

바르셀로나 선언 이후 EU와 지중해 연안국들간의 협조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중동 평화협정이 밀고 당기기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바르셀로나 선언에서 제시된 EU-지중해 연안국들간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이에 대한 현

실적 모습이 EU의 MEDA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EU는 연간 10억 유로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이 비슷한 규모인 약 10억 유로의 대출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집합적 차원의 협력 관계인 유럽-지중해 파트너쉽 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EU와 9개 지중해 연안국들(EU 가입 후보국 3개국 제외)이 개별적으로 협력관계를 맺는 쌍무 협정(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중반 현재 EU는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팔레스타인 당국, 이스라엘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 쌍무협정은 지중해 연안국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U와 지중해연안국 사이에는 지금 상당한 규모의 경제 교류가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EU로부터의 수입은 총 300억 유로(총수입의 약 47%)를 상회하며 EU으로의 수출은 630억 유로(총수출의 52%)로 수입액의 두 배에 달한다. 그렇지만 바로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EU 입장에서 경제 파트너로서 지중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중해 지역은 EU 회원국들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의 관심권 밖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중해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앞으로도 이 지역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은 지중해 연안국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경제성장의 격차이다. 다시 말해, 지중해 연안국들과 EU간의 관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지중해 연안국들 상호간 관계인데, 이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볼 때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회교권 국가간의 대립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국들중 이른바 마그레브 (Maghreb) 로 지칭되는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 -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와, 마스라크 (Mashraq) 로 지칭되는 지중해 동부 연안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은 같은 회교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정학적 입지나 문화와 역사가 상당히 다르다. 또 이들 연안국들 중 현재 키프로스, 말타, 터키 3개 국가는 상당한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EU 가입 희망국이며, 조만간 EU의 회원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 연안국들 사이의 협력 관계는 EU와 지중해 연안국들 사이의 협력 관계보다 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이 자유무역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중해연안국들 사이에서 안정과 평화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가능해 져야 한다. 즉 이른바 남-북 협력보다, 남-남 협력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EU이 지중해 연안국과 파트너쉽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쌍무협조 관계의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촉매 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접근을 하는 것. 둘째, 초국가적 차원의 이슈들을 다루는 것, 예를 들면, 인프라스트럭처의 상호 연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이 있다. 셋째, 남-남 협조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지중해 지역과 관련된 대외 정책의 목표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에 두고 있다. 첫째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근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간의 적대 관계의 지속, 이로 인한 전쟁과 테러의 위협, 또한 비민주적 독재체제의 온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EU과 지중해 연안국들 사이의 자유무역지대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안국들에게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EU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는 지중해 지역 각 국의 국민들과 시민사회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지중해 연안의 지정학적 상황과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회귀로 인하여 지중해 지역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필요성이 지중해 연안국들에게 점점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여전히 유럽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거의 약 10배 정도나 높은 실업률과 10배 정도 낮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국가적 목표는 바로 경제의 성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중해 연안국들은 경제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달가와 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민간 부분의 육성, 조세 제도 개혁, 금융 부문과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들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회 통합이다. 사회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제 구조의 전환이 기존의 내부 불평등을 더 확대시켜서 개혁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이들 국가의 가장 극빈한 집단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EU는 이들 지역에 대한 후원자로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MEDA 프로그램은 경제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수단들과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수단들로 구성된다. EU는 각 지중해 연안국들의 경제 구조 개혁 과정을 후원한다. 이제부터 MEDA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 MEDA 프로그램과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가능성과 문제점

MEDA(Mediterranean Development Aid) 프로그램은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이다. 유럽 연합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 지원해준 지원보조금은 주로 MEDA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출되었으며, 이 액수는 유럽 연합의 전체 예산 중 외부 지원에 배당된 예산의 약 11%에 달한다. 1995-2000년 기간동안 EU는 약 40억 유로(€)의 예산을 MEDA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중해 연안국들에게 지원하였다. 이는 전체 지중해 지역 지원 예산의 90 %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써, 나머지 10% 는 유럽투자은행 (EIB) 에 의해 관리되는 보조금이다. MEDA 프로그램은 바르셀로나 선언에서 협약한 2010년까지의 지중해 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설립이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 전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MEDA 프로그램을 통해 지중해 연안국들에게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될 때 나타날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MEDA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 구조 전환, 민간 부분 육성, 교육훈련 및 보건, 교육 지원, 상하수도과 같은 기초적 인프라스

력취 구축 지원 같은데 지원된다. 아래 표는 유럽 연합이 MEDA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중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정책 프로그램 내용이다.

표 2. EU의 지중해 지역 주요 지원 내역

차 원	목 표
정치적 측면	평화와 안전
	민주주의 시민사회 법치 인권 보호
경제적 측면	무역과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사회 발전
문화적 측면	각 문화간 갈등 방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증 방지

출처 : European Commission(1999; 2000)

한편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이 MEDA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 부문이 중시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지중해 지역의 오염은 거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해안 지역에 도시화가 집중됨으로써, 해안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또한 만성적 물부족, 사막화 현상, 일부 지역의 과잉 개발 등은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서 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MEDA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환경 부문은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통합적 해안관리, 사막화 방지, 환경적으로 취약하거나 중요한 특정지구 관리 등의 임무이다(European Commission, 2000).

또한 지중해 지역은 인류문명의 탄생지이며 수많은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관광 자원의 발굴과 보존, 다양한 문화주체들간의 이해 촉진 등 문화적 측면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국들은 비록 잘사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사회,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MEDA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역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와 지중해 연안국들간 자유무역지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EU과 지중해 연안국들사이의 통합의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넷째, 이 지역에서 법률적 지배와 훌륭한 통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이 지역 국민들 사이에서도 협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편 MEDA 예산 중 약 88%가

EU과 각 국가들간의 쌍무 협정과 관련된 것이고, 12%는 각 국가를 초월하여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는 지역적 차원의 협조와 관련된 것이다.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제1기 MEDA 프로그램이 끝나고, 2000년부터 제2기 MEDA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제2기 MEDA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지원 형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3. 각 국별 MEDA 보조금 배정 액수 (단위 100만 €,)

MEDA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95-2000
모로코	30		235	219	172	140.6	796.6
알제리			41	95	28	30.2	194.2
튀니지	20	120	138	19	131	75.7	503.7
이집트		75	203	397	11	12.7	698.7
요르단	7	100	10	8	129	15.0	269
레바논		10	86		86		182
시리아		13	42		44	38	137
팔레스타인	3	20	41	5	42	96.7	207.7
터키		33	70	132	140	310.4	551.1
쌍무 협정 소계	60	370	866	875	783	719.3	3540
지역 차원 지원	113	33	93	46	133	159.8	577.8
기술적 지원			22	20	21		63
총 보조금 합계	173	403	981	941	937	879.1	4179.8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0, p.12

EU 입장에서 볼 때, 유럽-지중해 파트너십의 궁극적 목표는 지중해 지역의 개방화와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개방화와 자유무역지대는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사항이다. 이러한 개방화가 잘 될 경우 지중해 연안국들은 EU과 경제 협력 관계 속에서 투자와 기술 지원으로 낙후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경제 종속이 심화되고 경제 구조의 다변화가 제약될 수 있다.

EU와 지중해 연안국들 사이의 자유무역지대가 실제로 완성될 경우 지중해 연안국의 향후 경제 발전 모형이 저숙련기술과 저투자, 저임금, 환경파괴형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지중해 연안국의 경제는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EU과의 파트너십 관계도 지속가능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EU이 지중해 지역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저임금이나 허술한 환경규제를 쫓는 EU 한계기업이나 환경오염기업의 진출처로만 지중해 연안국을 바서는 안된다. 경제적으로 더 깊은 수준에서의 상호 협력과 산업구조상의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지중해 연안국은 전체 외부 교역의 절반 가량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럽은 전체 무역의 10 % 가량만을 지중해 지역과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협력 관계가 약화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곳은 지중해 연안국 쪽이지 EU는 아니다. 따라서 자유무역 지구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유무역지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에 내재한 불균등 교환 구조로 인해 종속의 심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U가 EU 농업 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은 자유 무역을 원하나 농업에 있어서는 보호 장벽을 인정하자는 것도 불평등한 무역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지중해 지역의 경제가 유럽지역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고 수출 구조가 노동집약적 제품으로 특화된다면, 중국과 같은 아시아 저임금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개방화된 아시아 국가들이 90년대 말 체험한 경제 위기가 지중해 지역에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자유무역시대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국들은 지금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내부 통합을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중해 연안국들 사이의 남-남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무역구조를 유럽을 벗어난 다른 세계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지금까지 유럽연합과 지중해연안국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지중해 경제권의 현황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이 지역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EU는 지리적인 영역과 시장규모의 확대를 바탕으로 역외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실체가 될 것이다. 앞으로 EU는 확대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과의 정치, 경제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EU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 유럽권의 형성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통화동맹의 완성으로 단일경제권이 된 EU가 앞으로 중부 유럽, 동구 유럽 지역으로 회원국가를 확대시키고, 우크라이나, 발칸지역 국가들 등 주변국가들과 관세동맹을 맺고, 그 외부에 있는 러시아 및 흑해연안의 국가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국들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연결될 경우, 이는 하나의 거대한 유럽경제권의 탄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청사진 중 지중해 연안 지역들을 끌어안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는 양자에게 모두 위기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EU의 지중해 접근은 기존 타 지역(예를 들면, 남부유럽 및 동구유럽)과는 다소 다를 것이다. 기존의 상호접근을 통한 EU의 확대는 정치적·종교적으로 큰 장애물 없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동부 지중해의 경우, 경제적인 격차 및 내부적으로 국가간 심각한 갈등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만이 아닌 사회·문화·환경적 문제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 동구유럽을 회원국을 통합한 뒤, 지중해의 통합을 상징하고 있는 EU의 거대한 시나리오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EU의 지중해 접근 정책은 향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에도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지중해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지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간 경제적 격차 - 불균등성 -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 또한 후진국 상호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의 노력은 역시 일본과 같은 선진국 지역과 중국, 대만과 같은 신흥개발도상국 지역, 북한과 연해주 같은 저개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 경제권을 둘러싼 경제 협력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원택·조홍식, 1999, 유럽의 부활, 서울: 푸른길.
- 강현수, 2002, "최근 유럽의 지역정책 동향 : 유럽연합과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정책연구회, 제1회 유럽지역정책연구회 월례발표회(2002. 3. 15), 농정연구센터.
- 김영순, 1996, "지역통합과 역내지역불균형: 유럽연합의 경우," 지역연구 5(3).
- 이종광, 1996,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서울, 일신사.
- 이창훈·이종원·김대순, EU: 정치·경제·법, 서울, 삼영사.
- 윤명철, 2002, "동아시아의 지중해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 제9회 지중해연구소 학술대회 '지중해의 다양성과 통일성', 2002. 11. 22-23, 부산외국어대학교.
- 정성훈, 2002, "정부간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 EU 접경지역발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토 10월호, 국토연구원, pp.40-48.
- 정수일, 2002, "지중해 문명과 지중해학," 제9회 지중해연구소 학술대회 '지중해의 다양성과 통일성', 2002. 11. 22-23, 부산외국어대학교.
- 정인철, 2002, "지중해의 지리적 특성," 제9회 지중해연구소 학술대회 '지중해의 다양성과 통일성', 2002. 11. 22-23, 부산외국어대학교.
- 정홍열, 2001,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발전과 전망," 유럽연구 통권 제13호(여름).
- Bachtler J. and Turok, I.(eds.), 1997, *The Coherence of EU Regional Policy -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Structural Fund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alchin, P., et al., 1999, *Regional Policy and Planning in Europe*, Routledge.
- Cowling, K., 1999, *Industrial Policy in Europ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ractical Proposals*, Routledge
- Dunford, M., 1994, "Winner and Losers: The New Map of Economic In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2), pp.95-114.
- Dunford, M., 1997, "Mediterranean Economies: The Dynamics of Uneven Development," in King, R., Proudfoot, L. and Smith, B.(eds.), *The Mediterranean: Environment and Society*,

- London & New York, Arnold, pp.126-154.
- European Commission, 1999, *Annual Report of the MEDA Programme 1999*.
- European Commission, 2000, *Annual Report of the MEDA Programme 2000*.
- European Commission, 2001, *Euro-Med Partnership, Regional Strategy Paper 2002-2006 & Reg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 European Commission, 2001, *The Barcelona Process: The Europe-Mediterranean Partnership 2001 Review*.
- European Commission, 2002, *SMAP: Report on The First Five Years of Implementation (1997-2001)*.
- King, R., 1997, "Introduction: An Essay on Mediterraneanism," in King, R., Proudfoot, L. and Smith, B.(eds.), *The Mediterranean: Environment and Society*, London & New York, Arnold, pp.1-11.
- Jones, A., 1997, "The European Union's Mediterranean Policy: From Pragmatism to Partnership," in King, R., Proudfoot, L. and Smith, B.(eds.), *The Mediterranean: Environment and Society*, London & New York, Arnold, pp.155-163.
- Jung, S.-H., 2000, *The Global-Local Interplay: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EU*, D. Phil. Thesis, The University of Sussex, Brighton, UK.
- Leloup, C., Collombon, J.M. and Descroix, S., 2001, *MEDA Global Allocation Evaluation 95-2000: Synthesis Report*, COTA.
- Martin, R., 1999, "The New 'Geographical Turn' in Economics: Some Critical Reflection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pp.65-91.
- Martin, R., 1999, "Regional Policy" in McDonald, F.(ed.),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3rd ed.), Addison Wesley Longman Ltd.
- <http://europa.eu.int>
- http://europa.eu.int/comm/regional_policy